

정부, '지방소멸 대응기금' 144억원 확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10곳, 생활인구 통계 7개→89개 인구감소 전 지역 확대 추진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고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지원(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세 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 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포함한 광역 15개, 기초 107개에 배분된다.

이 기금사업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 평가 등급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데,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금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금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해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내용 변경도 허용한다. 기금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신규사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사업과 함께 올해부터는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거점의 대규모 펀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

인의 설립 및 출자를 지원한다.

특히 대규모 펀드 사업과 중·소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사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소멸 대응 사업도 확대된다. 은퇴자, 귀농·귀촌 주민의 지방이주와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공모사업도 기금사업과 지속 연계해 지원하고, 앞으로도 타 부처 연계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적 특례 발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를 현행 36개에서 올해 70개로 확대한다는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수립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과평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와 지표도 제공한다. 지난해 7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된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89개 인구감소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종합(정량)지표'와 지역 특성을 유형화 한 지역 특성 MBTI 등을 지자체에 제공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 수립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자 대상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에코시티 신규 도로 '백석 5·6길' 부여

전주시, 주요 교차로 등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 설치 예정

전주시는 에코시티 2단계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왕래할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신규 2개 도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명이 부여된 신규 지역은 에코시티 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신설된 도로구간으로 각각 '백석5길'과 '백석6길'이라는 이름이 부여됐다.

부여된 도로명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결정·고시됐다. '백석5길'과 '백석6길'의 '백석'은 흰색 차도를 뜻하고,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 사용해 온 지명으로 인근에 백석재 호수 등이 위치하기

도 한다. 각각의 도로 길이는 약 547m와 182m다.

이와 관련 에코시티 2단계 구역 내 도로명은 2016년도에 처음 부여된 '백석로'를 시작으로, △백석남로 △백석동로 △백석서로 △백석1길~4길이라는 8개의 이름이 부여됐다.

시는 이와 연계해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주요 교차로 등에 주소정보시설인 도로명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혼선을 피하고 지역에 걸맞은 도로명을 부여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 광역 소각시설 설치 '순항'

2028년까지 전주·남원·무주권 3개 광역소각시설 완공 목표 2030년 시행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완벽 대응

전북도가 전주·남원·무주권 3개 지역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무주권과 진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무주권 광역 소각시설에 이어 순창군을 포함한 남원권과 함께 김제·완주·임실을 아우르는 전주권까지 3개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총 4,646억원(국비50%)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지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3개 시설 모두 적기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루 45톤의 소각 규모로 지어지는 무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2022년 12월 설계에 착수한 이후 현재는 설계적정성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시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대체해 건립을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은 전주를 비롯해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수

용할 수 있는 하루 550톤 규모로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의 소각시설 부지에 짓는 것으로 결정됐다. 오는 12월 입지결정 고시가 이루어지면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당초 목표대로 2028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와 순창군이 함께 하는 남원권 광역 소각시설은 하루 100톤 규모로 지난해 9월 입지결정 고시를 통해 국회심의 단계에서 설계비의 일부인 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3개 광역 소각시설 설치가 완료될 경우, 도내 모든 시군이 소각시설을 보유하게 되어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완벽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을 차질없이 구축해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소각시설이 더 이상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4분 단축한' 소방헬기 통합출동

신속한 초기대응, 연내 전국 확대

소방청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중앙과 시도도 이원화 된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헬기가 신속히 출동함으로써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 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돼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 비용 또한 절감됐다.

이에 소방청은 이달 중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영남·호남 지역 8개 시도도 확대 운영한다. 또 봄·가을철 산림화재에 대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대해서도 연내 통합출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출동과 응급환자 이송으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



산악사고 소방헬기 구조활동.

(사진=소방청 제공)

련된 것"이라며 "산림화재 등 대규모·특수재난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제

반사항 정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통과

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점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